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79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

복지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4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 :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1. 4. 8.
- 회부일자: 2021. 4. 9.
- 검토기간: 2021. 4. 9. ~ 2021. 4. 19.

2. 제정이유

국정과제『온종일 돌봄 체계』정책 발표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돌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종합계획 수립 및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5조)
- 라. 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20조)

4. 관계 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5. 검토의견

-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달서구 차원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지원(안 제1조)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.
 - 조례안 중,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‘다함께 돌봄센터’의 설치·운영과 관련된 규정(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)임¹⁾.
 - 현재 우리 달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민 요구는 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<비용추계>자료에 따르면,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리모델링(75% 국·시비)·기자재 구입비(국비 100%)는 물론 센터 운영비(인건비 포함) 역시 국·시비 보조(75%)를 받을 수 있어 구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.
 - 따라서 집행부는 국·시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(質)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 센터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 - 한편, 행정의 지속성 원칙과 조례 운용의 예측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, 이들 상급기관의 보조 규모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구비 추가 부담이 필수적인 점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.
 - 안 제18조에 따르면, 센터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비용(이용료)을 징수(이는 그만큼 구비 부담이 줄어듦)하는 바, 집행부가 고려하는 이용료 수준과 이용료 감면 규정²⁾ 신설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.
-
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의 조 명칭이 “다함께돌봄센터”이듯이, 구청장은 동 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(안)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바, 조례안의 핵심 규정은 결국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라 할 수 있음. 이를 반영해 대구시 수성구·남구 경우 조례명(名)을 <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로 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.
- 2) 경북 칠곡군, 인천광역시 남동구, 광주광역시 남구 경우 이용료 감면(또는 전액 면제)규정을 마련·시행하고 있음.

집행부 제출 :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가. 기간: 2021년부터 연중

나. 주요 내용

-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

2. 비용발생 요인

-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
-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

3. 관련조문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5조~제6조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16조~제17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21년부터 추진할 사업(3년)에 대한 비용 추계

-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목표

(단위: 개소)

연도	계	2021년	2022년	2023년
개소수	2	1	1	0

나. 추계의 결과: 383,660천원

- 설치비: 140,000천원
 - 70,000천원(리모델링비 50,000+기자재비 20,000) × 2개소
- 인건비: 225,420천원
 - 2021년: 13,260천원(3개월분), 2022년 이후: 106,080천원(12개월분)
- 운영비 등: 18,240천원
 - (운 영 비) 2021년: 900천원(3개월분), 2022년 이후: 7,200천원(12개월분)
 - (회의수당) 2,940천원(70천원 × 7명 × 2회 × 3년)

다. 재원조달방안: 국비, 시비 및 구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68,120	142,460	84,960	295,540
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	57,500	57,500	0	115,000
" 인건비	9,945	79,560	79,560	169,065
" 운영비	675	5,400	5,400	11,475
세 출	85,140	184,260	114,260	383,660
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(리모델링비, 기자재비)	70,000	70,000	0	140,000
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(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)	13,260	106,080	106,080	225,420
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(공과금 등, 협의체 회의수당)	1,880	8,180	8,180	18,240
재원 조달				
소 계	68,120	142,460	84,960	295,540
국비보조금	52,080	101,640	56,640	210,360
시비보조금	16,040	40,820	28,320	85,180
구 비	17,020	41,800	29,300	88,120
지방채				
기 금				
기 타 (민자 등)				

6. 작성자: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이선미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아동복지법」 (법률 제17206호, 2020.10.01.시행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

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 (법률 제17782호, 2020.12.29.시행)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